

주요 경제 정책 및 이슈

(1996. 11. 20~12. 20)

11. 21

재정경제원, 「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」 개정

- 12월 중순부터 원광석, 원모, 고행 등 14 개 수입 원자재의 관세를 무세화
- 이에 따라 해당 제품 수요 기업에 연 700억 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

11. 25

재정경제원, 「투신사 주식 매수 기반 확충 방안」 마련

- 투신사의 주식 매입 여력을 늘리기 위해 한국투신 등 3대 투신사에 2,600억 원 규모의 증자 허용
- 14 개 신설 투신사에 신상품 판매 대폭 허용

11. 26

국회, 「OECD 가입 비준 동의안」 국회 통과

- 'OECD 협약 가입 동의안' 과 '韓·OECD간 특권면제협정 비준 동의안' 표결 처리
- 대통령 비준 절차를 거쳐 한국의 OECD 가입은 12월 하순 완료 예정

12. 3

노동부, 「노동 관계법 개정안」 확정

- 1997년부터 상급 단체에 한해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단위 사업장은 2002년 허용
- 1 주일 56 시간 한도 내에서 4 주 단위의 변형근로제 도입
-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리 해고제를 도입

12. 11

재정경제원, 「1997년 수출입은행 업무 계획안」 승인

- 1997년 수출입은행의 수출 자금 지원 규모 증액(1996년 4조 6,500억 원 → 5조 7,000억 원)
- 해외 투자 자금과 수입 자금은 각각 4,300억 원과 2,000억 원으로 동결

12. 12

증권감독원, 「기업 회계 기준」 개정

- 장기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 손실을 당기 결산에서 제외
- 이에 따라 12월 결산 법인들은 약 2조 5,000억 원의 순이익이 증가할 전망

12. 13

재정경제원, 「세법 시행령 개정안」 확정, 1997년 시행

-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매각시 양도소득세 면제
- 제조업과 광업, 도소매업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를 적용

12. 15

재정경제원, 「채권 시장 추가 개방 방안」 발표

- 1997년 1월부터 상장 중소기업 및 장외 시장(코스닥) 등록 중소기업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
- 중소기업 전환 사채(CB)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(상장액의 30% → 50%, 1인당 투자 한도 5% → 10%)

12. 16

재정경제원, 「증권 시장 수요 확충 방안」 발표

-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이용료율을 연 3%에서 5%로 인상
- 1997년부터 상장 기업의 유상 증자 및 해외 증권 발행 요건을 배당 수준과 연계
- 증안 기금이 보유 중인 4,000 억 원의 현금을 금융 기관 등 출자자에게 배분

12. 17

건설교통부, 「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」 마련

- 개별 입지 공장, 중소기업 전용 공단, 국민 주택 건설용 택지를 조성한 경우 개발 부담금 50% 감면
- 개발 부담금의 분할 납부 기간도 현행 1 년에서 5 년으로 연장

12. 20

재정경제원, 「국발발행제도 개선 및 1997년 발행 계획」 발표

- 1997년부터 국채 강제 인수를 없애고 국채 발행을 실질적인 완전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개선
- 1997년 국채 발행 규모는 7조 6,430억 원으로 1996년의 8조 8,747억 원보다 13.9% 축소

12. 20

노동부, 「노사 협력 우량 기업에 대한 세무 지원 방안」 확정

- 1997년부터 산업 평화에 앞장선 노사 협력 우량 기업은 성실 납세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세무 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
- 회사채 발행 몰량 조정시 0.5점의 가산점 부여, 기업 신용 평가시 4점을 가산